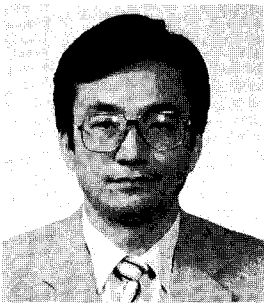


물가상승과 물가구조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학박사>



한자리수에 묶어 두려고 했던 물가상승율이 금년 1월 한달 동안에 벌써 2%의 상승율을 보이고 있다. 연상승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묶는 것이 목적인데 1개월 상승율이 2%선에 달하고 있다면 이것은 벌써 물가정책의 목적이 빗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2월부터의 상승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억제된다면 한자리수의 목적이 달성될 수는 있다. 그러나 물가문제는 어느 수준에서 억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물가구조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책임은 자유시장제도이며 자유시장제도는 가격기능에 의해 움직여져 나가는 경제제도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원천은 가

격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고 이 가격을 매개로 이러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된다. 그런데 개별상품은 독립적으로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들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상품의 가격은 반드시 다른 상품의 가격과 연관되어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노동가격인 임금이 변하면 모든 상품의 생산비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품가격도 변하게 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월급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월급이 오르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매하는 상품값을 인상시킬 것이다. 또 밀값이 오르면 밀가루값이 상승하고 빵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 경제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개별상품들의 가격이 종합되어 하나의 지수로 표시되는 것이 물가이다.

그러므로 물가는 모든 개별상품의 가격수준을 일괄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지수이다. 이러한 물가는 물가의 수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물가수준을 만들어 내는 개별상품들의 가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물가구조도 매우 중요하다. 이 물가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물가수준 자체도 빠르게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이 물가구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전반이 왜곡된다. 즉 물가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물가구조에 의한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크게 왜곡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물가억제의 수단으로 개별상품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물가상승의 2원화 현상이 나타난다. 즉 통제가 쉬운 상품의 가격은 계속 억제되고 통제가 어려운 상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

공공요금등은 쉽게 통제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투기가 일어나는 상품들은 통제가 어렵고 쉽게 상승한다. 이러한 물가정책하에서는 물가구조가 크게 왜곡되기 쉽다. 정부에 의해 쉽게 통제되는 상품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따라서 이 부문의 산업성장은 크게 위축된다. 그리고 투기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상승하는 부문에서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물가구조가 크게 왜곡되고 이러한 물가구조하에서는 건전한 경제활동이나 건전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부동산가격은 우리나라의 물가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물가구조를 크게 왜곡시키는 현상까지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론적으로 물가상승은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통화증발, 팽창예산, 선거, 임금인상, 과소비 등등이 주요한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폭등은 물가상승의 커다란 원인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87년 이래로 3년동안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의 임대료가 상승한다.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는 경제활동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이나 부동산의 임대료가 상승하면 부동산을 이용하는 이러한 경제활동의 기본비용이 상승한다. 즉 자본비용이 상승한다. 이러한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이러한 경제활동을 거쳐 나오는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을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물가상승압력은 더욱 높아진다.

이와같이 부동산가격상승은 바로 물가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통화팽창, 예산팽창, 임금인상, 과소비, 선거등이 덧붙여지면 물가상승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물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가격 폭등은 일반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가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이 된다.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더불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게 되었다. 재산소득이 늘어나고 임대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증가된 소득이 생산자금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과소비로 연결되면 사치성 재화의 소비가 급등하면서 이 부문의 수입과 이 부문의 산업이 활성화된다. 즉 사치성 소비재산업이나 유흥업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된다. 즉 이 부문과 관련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자원배분을 크게 왜곡시킨다. 그리고 다른 부문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이와같이 물가문제는 물가수준 그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품들간의 상대적인 가격을 나타내는 물가구조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물가상승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내의 모든 상품가격들이 서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면서 책정되도록 하여 경제의 각 부문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통제하기 쉬운 상품들의 가격은 과도하게 억제한다든지 하면 물가구조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가능한 한 통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가능한 한 자유로운 시장활동에 의해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투기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문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여 균형가격자체가 적정화되도록 유의해 주어야 한다. 즉 가격자체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정책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균형가격을 조절하는 정책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